

光日春秋

한승헌



아프간 피랍자들의 생환은 누가 뭐러던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이끌어낸 성과였다. 생존자 '전원 석방' 합의가 공식 발표되었을 때, 그동안의 극한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 하고 간절히 염원하던 모든 국민들은 감사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거개의 언론들에서는 정부 측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은 채, 이런저런 문제점만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외국인의 시각, 현실을 무시한 평가, 정부 평화의 속셈까지도 드러나 있다. 두 목숨의 희생은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나머지 피랍자를 45일 만에 무사히 생환시킨 마당에 그 과정상의 방법이나 조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불과 며칠 전 만하더라도 피랍 후의 상황은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가. 지난 7월 19일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반정부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의 놀라움과 절망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탈레반은 처음엔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정부

가 연내 철군방침을 밝히자 이번에는 탈레반 죄수 23명과 인질의 맞교환을 석방조건으로 내세웠다.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의 시한을 정해놓고 인질 살해의 협박을 되풀이했다. 탈레반 포로의 석방은 우리의

피랍자 생환, 상황 선택 언론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고, 아프간 정부와 미국의 반응은 냉랭했다. '테러집단과의 협상은 없다'는 그들의 원칙론 앞에 달리 통과가 없었다. 배형규 목사의 피살, 대통령 특사의 아프간 파견, 고도로 계산된 탈레반의 언론플레이와 심리전, 심성민씨 추가 살해, 한국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탈레반의 전략, 양측 대면협상의 개시, 여성 인질 두 사람의 석방, 대면협상의 재개, 전원석방 합의에 이르기까지..

탈레반의 총부리 앞에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인질들의 절망적 표정을 동영상으로 접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 국민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람만 무사히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런 간절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전력을 다했다. 밖으로 알려진 보도만으로도 제반 악조건 속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전원 석방'의 합의가 발표되고 나자 언론은 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입을 모아 탈레반과의 직접 협상을 문제 삼았다. 아프간이나 미국이 범당했고 달리 사태를 풀어야 할 바도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인질을 두 사람이나 살해하는 마

당에, 무장단체의 직접 협상 요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우리 쪽에서 직접 대면을 요청하고 싶은 한국이 아니었을까. 수많은 자국민이 무장집단의 총구 앞에 떨고 있는 마당에 테러집단과의 협상금지원칙에 묶여있을 정부가 얼마나 있을까. 사태 해결 전후의 외국 언론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좀 더 분명히 반론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테러집단과의 협상 불가, 몸값 불가원칙만 준수하고 있다가 우리 형제가 몰살당했다면, 그때 언론은 무어라고 할 것인가. 분명코, '인명이 최우선인데' 운운했을 것이다. 어쩌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켰으니 잘했다고 할 것인가, 우리 정부의 선택은 트집의 대

상이 될 수가 없다. 잘 한 일은 (누가 했던 건데) 잘했다고 인정하는 풍토가 아니다.

'연말 철군'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서 협상에서의 이점을 놓쳤다고도 한다. 철군 시기는 여차피 계획되어 있던 것이어서 초동단계에서 인명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였다. 만일 그와는 달리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한국군의 아프간 철수시기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굴욕'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시종 탈레반에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같은 특수상황 하에서 무슨 수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장의 과잉노출과 과잉홍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가야 그럴 수도 있지만 '전 계인 물수'를 하듯이 정부를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흔히들 공과(功過)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으로 과를 씻을 수 없듯이, 과를 이유로 공 자체를 부정해서 안 된다. 다음 정권을 맡아보고 싶은 정당이나 지도자라면 지금의 국가공직이 바로 다음번의 내(우리) 자리라는 가정

을 하고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옳다. 우리는 이번 인질사태를 조정한 탈레반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하여 분노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의 해외파병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학이 자격증 불법대여 부추긴다니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학생들의 국가 공인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등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자격증 대여 알선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학이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일부 대학들은 외부업체에서 문의가 오면 학과 사무실이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격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대학이 있을 정도로 자격증 알선행위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불법대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대여 학생을 취업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자격증 대여 대가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동전을 마련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야 할 대학과 학생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 놀라기만 하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영세 건설업체에서 성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급여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정식 고용이 아닌 자격증만으로 건설업계에 규정된 기술자의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기술자는 없고 자격증만 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자격증 대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토목과 건축, 전기 공사 등의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법 행태는 도덕적으로도 용납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자격증 불법대여자는 물론 알선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다.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 우주 개척 계기 되길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고산씨가 선정됐다. 광주출신 이소연씨가 탈락돼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우주인 탄생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우주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씨는 내년 4월 러시아 우주인 2명과 함께 러시아 우주왕복선 소유스를 타고 우주비행에 나선다. 지구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SSI)에 도착해 7~8일간 머물면서 각종 과학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고씨가 무사히 돌아오면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된다.

우주인으로 최종 선정된 고씨는 '비세중력상태에서의 우주인 신체형상 변화 연구' '한반도 관측 및 촬영' 등 18개 주제를 놓고 실험을 실시한다. 어렵게 탈락한 이씨는 예비우주인으로 남아 고씨가 우주선에 탑승하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훈련을 받게 된다. 또 고씨가 지구로 귀환한 후에는 고씨와 함께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는 본격적인 우주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우주개발은 21세기를 먹여 살릴 꿈의 기술로 주목받으며 우주 공간 영토확장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젊은 이들의 심각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서 보듯이 과학과 기술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래선 우주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주인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고충 외나로도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등 우주 개척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우주인 탄생이 우주 개척은 물론 과학의 대중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주인 프로젝트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

최정주



10월 광주에서는 제2회 디자인비엔날레, 정음성 국제음악제, 임방울 국악제, 광주김치대축제와 특히 10월 8일에는 14년 만에 유치한 제88회 전국체전이 1주일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다. 민중홍보의 상징인 '광주' 브랜드를 대내외에 홍보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가 중요하다.

특히 화재발생시 불법 주차장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들어갈 수 없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을 최소화하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기위한 필수항목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출동로 30초 앞당기기' 일환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화재발생시 현장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진입수단 강구를 위해 '불법 주차장 일제단속의 날'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시범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차량 차선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차장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

소방출동로는 생명의 도로

에 없다.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화재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출동로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양쪽 불법주차장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1년도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 때 불법주차 차 차량 때문에 현장진입이 늦어져 6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출동로'는 '생명의 도로'이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가 화재로부터의 재난

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 우리 모두가 지킨 작은 질서가 큰 불행은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형성과 적극적인 참여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79불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OECD 가입국으로 2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젠 선진국의 성숙한 질서인식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도 인간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 지키기, 생활속에 작은 질서를 나부터 실천하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고3들 긴장감 해소 카페인 음료 건강 해쳐

고3학생들은 올 가을이면 수능시험을 치른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학생뿐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심리적 중앙감 때문에 많이 찾는 음료는 커피나 드링크제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많이 복용한다.

긴장감을 이기기 위해서라지만 부작용이 적잖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님들과 가족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커피와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중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한잔, 습관적으로 마신다.

하지만 자칫하면 커피 한잔에는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의 절반이 들어있다. 자칫

커피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실 경우 카페인을 과다섭취할 수 있다. 카페인이 든 드링크와 인스턴트 커피도 보통 3잔 이상 마실 경우 하루 섭취량을 넘는다고 한다. 특히 카페인은 뼈 속의 칼슘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과다섭취할 경우 칼슘부족을 부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커피 뿐만 아니라 각종 드링크제도 마찬가지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많이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흥분과 불안 상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방해하고 모든 능률을 떨어뜨린다. 긴장감을 잊게 하고 먹는 카페인 음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니 적당한 최소한만 마시는게 좋을 것 같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예나 다름없이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끼 수 있었다.

세계 나라들 중 흡연과 음주량이 1~2등이라는 통계 발표가 거짓이 아님을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정말 많다. 오래 살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술·담배들을 챙기니 아이러니다. 그런 것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무효화시킬 뿐 아니라 더욱 악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경비가 거의 1년을 벌어야 될 정도의 수준인데다 면허정지, 감옥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탓에 현지인 중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도 비슷하다.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외국에 팔아먹기 위해 열심히 이 유는 미국에서는 흡연자의 살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미국인은 거의 볼 수 없다. 식당, 공공장소나 직장 심지어는 공원이나 해변에서도 흡연이 불법으로 되어있다.

미국에서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일 년에 40만명. 타살·자살·교통사고·중독전염·AIDS·알콜 및 마약 중독

술과 담배에 찌든 한국인

면서도 입에는 담배가 물려있는 '회한한' 장면은 쉽게 볼 수가 있었다. 우선 알콜이 해로운 물질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타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사회에서는 술은 집에서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 하다가 걸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음감한(?) 한국 사람들이고 술이 이미 취해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면 불법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돼 있지만 역시 걸려든 사람들은 음감한(?) 한국 술집 주인들이다.

영화가 아닌 미국 길거리에서 술주정하는 미국인을 아직 본 일이 없다.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마도 LA 한인타운의 밤거리뿐일 것이다. 또 그들은 한국서 최근에 온 방문자들이라는 것이 교묘를 생각이다. 아마 거의 맞을 것이다.

으로 사망한 사람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한다. 담배는 30가지 이상의 발암 인자를 가지고 있다. 폐암의 85%가 담배로 인한 것이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 폐암은 15-25배, 심장 마비는 2배, 뇌졸중은 2-3배가 높다.

비 흡연자 폐암의 17%는 주위의 다른 사람의 흡연에 의한 것이고 흡연자 가족의 폐암 걸리는 비율은 비흡연자 가족보다 2배나 높다. 자기 좋다고 피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멋지게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사람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게 해달라는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자기만 조용히 죽으면 될 것 외, 불구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평생 대소변 받아내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머리도 담배로 인해 망가져버린 것이다.

도시 위주 주택 정책 좋지만 농가형 임대주택도 개발해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접하다 보면 ஏ간 불만스러우게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값이 싼 임대주택은 몇백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왜 농촌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 집은 도시에만 필요하게 아니지 않겠는가. 정부 정책대로라면 도시의 저소득 서민층은 정부에서 지어주는 임대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살고 농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농가주택에서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

로만 왜가고 있으니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국 농촌의 주택 거주 실태를 파악해서 농가형 임대아파트 또는 농가형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농촌 크기에 맞춰 단지별로 지어주기 바란다.

도시 사람들은 5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버듯한 24평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다.

시골의 농민들이라고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임대아파트가 농촌에 많이 세워지면 도시인들의 농촌이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유병숙·담양군 담양읍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시사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